

www.kita.net



# 워싱턴통상정보

2025.03.20

##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우려와 실효성 의문 제기

이후권 과장(wg.lee@kita.or.kr), 권준희 대리(jh.kwon@kita.or.kr)

※ 이하 시간 표기는 미국 현지시간(EST)

### I 美 기업 및 협단체의 우려

- 美 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세는 교역국의 보복 조치 또는 미국 소비자 가격 상승을 회피하는 전략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주장
- 맞대응 방식(they charge us, we charge them)에 기반한 상호주의 관세는 보복 관세, 경제 안정성 저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

#### ① 관세 도입 반대

- (美 상의) 집행 가능한 FTA 체결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해외시장 접근, △상호주의 보호 등을 유도하는 성장 지향적(pro-growth) 접근법이라고 주장
- (RILA\*)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나, 궁극적으로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 수립이 요구됨  
\*美 소매업지도자협회, Retail Industry Leaders Association
- (CCIA\*) 상호주의 무역의 궁극적 목적은 외국산 상품·서비스 수입제한이 아닌 무역장벽 제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USTR에 전달(3/11)  
\*美 컴퓨터통신산업협회,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 (EAA\*)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적하고 교역상대국의 정책을 변경시킬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非전략적(non-strategic)방식으로는 미국의 해외 시장 접근을 확대시킬 수 없음  
\*美 국제물류협회, Express Association of America
- (테슬라) 미국의 관세 조치의 여파로 미국産 전기차에 대한 상대교역국의 관세 조치 사례를 들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이로 인한 보복 조치로 미국 수출 업체들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USTR에 전달

## ② 경제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저해

- (ASA\*) 관세 정책의 지속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될수록 해외 시장은 미국 농산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공급처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

\*美 대두협회, American Soybean Association

- (NAM\*) 제조공장 신설 계획부터 완공까지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들의 장기 자본투자 계획 수립을 지연시킴

\*美 제조업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 II 관세 정책 실효성에 의문 제기

□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일각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美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Chad Bown 선임연구원과 다트머스대 Douglas Irwin 교수는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에 실린 기고문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교역국의 즉각적인 보복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통해 △세수 확보, △무역 적자 감소, △상호주의 적용, △국가안보 강화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관세가 이를 위한 최적의 정책 수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 ① 세수 확보와 조세부담

- 관세를 통한 세수 증대는 가능하지만, 기존 세수 감소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재원을 창출하기 어려움
- 궁극적인 관세 부담은 외국 기업이 아닌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특히 캐나다 및 멕시코産 에너지, 식품,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② 무역적자 감소

- 미국의 무역적자는 단순히 교역국의 불공정 행위 때문이 아니라, 국내 경제 구조 및 재정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관세 부과만으로 무역적자가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며, 오히려 연방 재정적자 감축이 무역적자 완화에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③ 상호주의 적용

- 트럼프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 교역국의 對美 관세율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일본(자동차), EU(트럭), 뉴질랜드(유제품) 등은 이미 미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트럼프의 상호주의 논리는 일관성이 부족하며, 미국이 교역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감내할 의사가 있는지도 불분명함

#### ④ 국가안보 강화

-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이 전략산업 보호 및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으나, 동맹국과의 협력 및 공급망 안정화가 더욱 효과적인 대안임
- 아울러, 보호무역주의적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보다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다목적 정책 수단으로서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하며, 보다 효과적인 대안으로 △동맹 협력 강화, △재정 적자 감축, △세제 개편 등을 제언

#### ① 동맹 협력 강화

-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전략산업의 공급망을 동맹국과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함
- 특히 對中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오히려 미국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킬 위험이 있음

#### ② 연방 재정적자 감축

- 재정적자가 축소되면 정부의 차입 수요가 감소하고 금리가 하락하며,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의 미국 자산 투자 유인이 약화되어 무역적자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경제 문제 상당수는 대외 무역보다는 국내 재정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음

#### ③ 세제 개편

- 기업이 국내 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법인세 구조를 개선하고, R&D 지원 확대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관세 부과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

### 참고 자료

- 2025.3.11(화) CCIA, CCIA Submits Comments in Response to USTR Review of Unfair and Non-Reciprocal Foreign Trade Practices
- 2025.3.11(화) CCIA, CCIA Comments to USTR In Reviewing and Identifying Unfair Trade Practices
- 2025.3.13(목) Inside US Trade, Outside voices: 'Why is Trump so focused on tariffs?'
- 2025.3.13(목) Inside US Trade, Industry groups seek free trade deals, not tariffs, from 'reciprocal' policy
- 2025.3.13(목) Inside US Trade, Tesla urges caution on 'reciprocal' tariffs
- 2025.3.11(화) Foreign Affairs, The Incoherent Case for Tariffs